

2015. 국가직 사회 강평 및 해설

[김대근 강사]

[2015년 국가직 사회 강평]

국가직 사회 출제 난이도는 2013년~2014년 기출된 문제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평이했습니다. 이번 사회에서는 법과 정치 10문제(50%), 경제 5문제(25%), 사회문화 5문제(25%)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패턴은 앞으로 정형화 되리라 여겨집니다.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책형 3번의 실증적 연구과정을 묻는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다소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보기 ①에서 명백히 정답이 추출되므로 빨리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제 파트에서는 사회를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시간이 소요되는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 자신이 가진 경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력이나 숫자에 대한 감각이 수험생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기에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사회 과목에 대한 수험전략은 각자가 선택한 기본서를 통독하면서 경제 파트는 따로 떼어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 보는 전략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1번 해설] ②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보기의 지문은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분배되는 것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기능론의 입장이다. ①③④는 갈등론이고, ②는 기능론의 입장이다.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이론적 배경		사회유기체설(스펜서)	계급투쟁설(마르크스)
전제		- 사회는 상호 의존, 보완, 조화 - 현상 유지의 속성	- 대립, 갈등, 투쟁, 긴장 - 현상 파괴적 속성
강조점		사회 질서 유지와 통합에 초점(현상 유지의 균형적 측면) : 보수적 관점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관계에 초점(현상타파적 변화의 측면) : 진보적 관점
계층화		- 희소가치의 차등배분은 사회적 합의 - 계층화는 일에 대한 동기 부여	- 지배집단이 강제 -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함
갈등		- 예외적·비정상적 현상 - 사회병리현상으로 간주 - 가만히 두면 균형을 찾음	- 보편적·필연적 현상 -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사례	청소년 문제	가족과 사회의 제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청소년 문제 발생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
	정리 해고제	정리 해고제가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기 조절을 위해 나름대로 기능을 한다고 봄	정리 해고제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봄
	법	법은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한다고 봄	법을 기득권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봄
	학교	구성원의 사회화, 인재 선발과 양성 기능을 담당	지배 집단의 가치 주입,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곳
비판		- 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 - 갈등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간과	- 사회 변동을 강조하여 사회 안정과 질서,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경시함 - 사회 각 구성 요소들 간의 합리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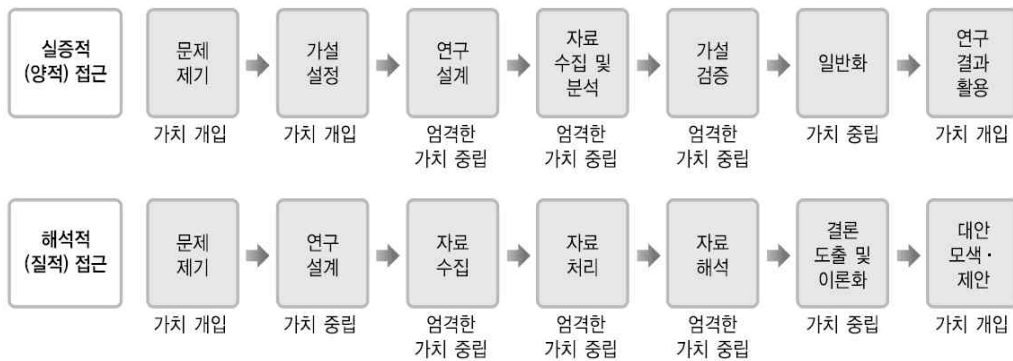
	• 급격한 사회변동(ex 혁명)을 설명하기 곤란함	분담을 설명하기 곤란함
--	-----------------------------	--------------

[2번 해설] ②

세계 각국에서 이주한 외국인 주방장이 자국의 음식 맛을 재현한 식당을 여는 것은 **직접 전파**를 말하고, 이민으로 인한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외국 음식 문화와 한국 음식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도 함께 보여 준다.

[3번 해설] ①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과정을 의미한다. ① 실증적 연구과정에서는 자료 수집 전까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가)(나)(라)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OO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었으므로 분석 결과를 OO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④ (가) 문제제기 ⇒ (라) 가설 설정 ⇒ (마) 자료 수집 ⇒ (다) 일반화(결론 도출) ⇒ (나) 연구결과 활용(대책 수립)의 과정을 거친다.



[4번 해설] ③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 계약설에 입각한 사회 명목론을 의미한다. ①②④는 사회 실재론, ③이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명목론(社會名目論)	사회실재론(社會實在論)
•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 • 사회는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 • 개인 > 사회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 사상 -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 이론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사회 문제, 일탈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음 • 개개인의 특성이 사회의 특성을 결정함 •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개인의 의식, 정서, 심리 상태를 중시함	• 사회란 개개인의 합을 뛰어 넘는 그 이상의 독립적 실체 • 사회 > 개인 •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 사상-전체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 이론-사회유기체설 • 뒤르켐, 콩트, 스펜서 • 사회 문제, 일탈 행동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음 •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결정함 •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구조적·사회적 요인을 중시함

로크(Locke, J.) : “시민 사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동의한 계약에 따라 시민 사회를 형성한다. 이 때, 사회 성원 각자가 시민 사회에 양도하는 권력은 시민 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히틀러 (Hitler, A.) : “국가나 민족을 떠난 개인이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은 국가나 민족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나 민족은 단순한 강제 조직이나 권력 기구가 아닌 전체로서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나 민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국가나 민족이 허용하지 않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	---

[5번 해설] ②

A는 관료제를 말한다.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탈관료제이다. ② 관료제의 특징이다. ③ 의사결정권이 **상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 관료제의 문제점이다. ④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한 것은 탈관료제이다.

관료제	탈관료제
• 수직적, 하향식, 중앙집권적	• 수평적, 상향식, 분권화 조직
• 자율성, 창의성 결여	• 자율성, 유연성, 신속성
• 안정성, 정규직, 고정급, 형식·절차 중시	• 안정성 결여, 계약적, 성과급, 업무 중심
• 중간관리자 역할 중요	• 중간 관리자 역할 축소
• 근대 산업사회에 효율적	• 정보화 사회

[6번 해설] ①

①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

[7번 해설] ④

폭행, 협박, 강간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법적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

[8번 해설] ②

②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모두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행정감독, 행정통제	행정구제, 권리구제
대상	위법, 부당	위법
담당기관	위원회	법원
성질	약식쟁송	정식쟁송
종류	항고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9번 해설] ④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④ 소극적·방어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10번 해설] ③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는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1번 해설] ②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므로 지역대표성이 약하다.

[12번 해설] ①

(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국가 기관 구성 기능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다. (나)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 감시 통제 기능을 한다.

[13번 해설] ③

① 민회는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된다. ② 아테네의 민회가 아니고 오늘날의 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쟁 관련 직책(ex 장군)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아테네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추천제가 활용되었다.

[14번 해설] ④

베스트팔렌조약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으로 1648년 10월 독일의 북서부 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조인되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 · 스웨덴은 영토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 의회 참가권을 얻었다. 독일의 제후들은 완전한 영토 주권을 인정받았고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을 계기로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15번 해설] ④

① 홉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은 로크의 주장이다. ③ (가)는 홉스, (나) 로크의 주장이다.

[16번 해설] ②

① 2014년의 금융계정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② 국제수지의 흑자가 계속되므로 외환보유액은 계속 증가했다. ③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였다. ④ 자본·금융 계정도 계속 흑자였다.

[17번 해설] 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차 함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Q를 x로 바꾸고, P를 y로 바꾸어서 연립 일차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가격 P에 임의의 수를 대입하여 Q가 같아지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①번 보기에서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P에 2를 대입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3으로 같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②④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x=7-2y$, $x=1+y$] 그 면적을 구해보면 소비자잉여는 2.25가 나오고 생산자잉여는 4가 계산되므로 사회적 잉여는 6.25가 된다.

[18번 해설] ①

(가)에서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은 햄버거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나)에서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의 상승은 햄버거 공급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장거래량은 확실하지 않지만, 시장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19번 해설] ④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 활동 인구(취업자 + 실업자)}}{\text{노동가능인구(만 15~만 64세 이하)}}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 활동 인구(취업자 + 실업자)}} \times 100$$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quad (\text{남성과 여성의 노동가능인구는 각각 일정})$$

① 그림에서 남성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남성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므로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② 여성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③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정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일정하고 여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A국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이므로 감소하게 되고,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다.

[20번 해설] ③

① A국의 로렌즈 곡선은 완전평등선을 나타내므로 소득분배가 가장 균등하다. ② B국은 하위 소득 인구의 40%가 약 2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④ D국이 가장 불평등하고, 지니계수의 값도 가장 크다.